

2017

Report of Trend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7. 05. part1 제 73 호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 | | |
|---|----|
| 1. 규제공화국 민낯 ... 기업 이탈 세계 최고인데 U 턴은 겨우 43 곳 | 3 |
| 2. ' 지방분권 · 균형발전 ' 국정운영 핵심축 기대 | 5 |
| 3. " 우리공약 먼저 " 지자체 예산전쟁 시작됐다 | 6 |
| 4.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개편 | 8 |
| 5. 자치분권 · 균형발전 비서관 신설...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 | 9 |
| 6. 자유한국당 " 공약위한 추경은 반대...노동개혁 · 규제프리존법 처리해야 " | 10 |
| 7. 대북사업 · 행정수도 · 청주공항...지자체 숙원해결 기대 커졌다 | 11 |
| 8. 김보라 경기도의원 ,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 13 |
| 9.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폐기 · 대폭 수정 전망 | 14 |

II . 수도권 추진동향

- | | |
|---|----|
| 1. [19 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 경기도 10 대 과제] - 경기도 규제완화 & 위상강화 | 15 |
| 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 도시재생... 서울시 숙원사업 탄력받을 듯 | 16 |
| 3. 경기북부 규제완화 · 통일경제특구 재추진...남북 긴장완화 ' 기대' | 17 |
| 4. 경기도 , 미군 공여지 개발 · 접경지역 규제 풀리나 | 18 |

III .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 | | |
|--|----|
| 1. ' 난개발 ' 위험 소규모 산업단지 , 지방보다 수도권서 급증 | 19 |
| 2. 충남 수도권 규제 완화 새 정부서 철회될까 ? | 20 |
| 3. 충북공약 사실상 12 건 ' 역대 최다 '...중핵경제권 집중 육성 | 21 |
| 4. 대전 · 세종 · 충남 주요 현안 ' 새 정부서 힘 받는다 ' | 22 |
| 5. " 전북 , 실망없다 " 공언대로 새만금 · 농생명산업 ' 꽃길 걸을까 ' | 23 |
| 6. 대구경북에 내건 주요 공약 | 24 |
| 7. 울산공약 탄력 받을듯 | 25 |
| 8. 문재인 시대와 강원도 _ 규제완화 | 26 |

1. 규제공화국 민낯 ... 기업 이탈 세계 최고인데 U 턴은 겨우 43 곳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0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서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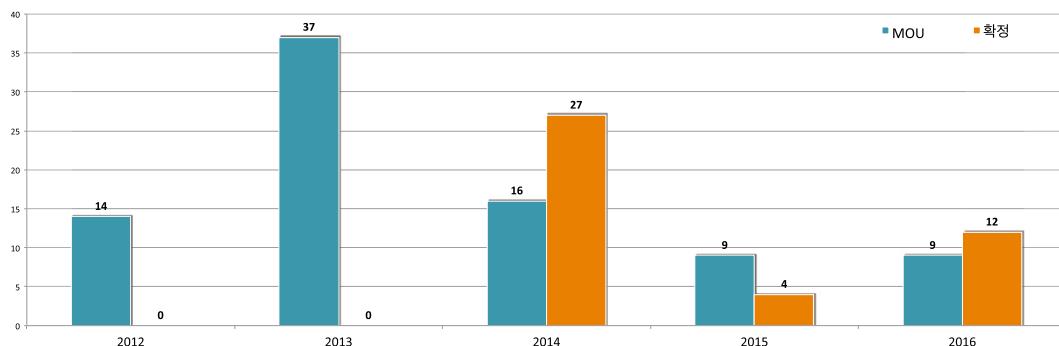
02

주요내용

- 해외투자 10년새 639% ↑ OECD 평균보다 8 배나 높아 기업들 돌아와도 규제 수두룩 공장 짓고 가동까지 6 개월 걸려 "법인세 인하 · R&D 보조금 등 정부 과감한 지원 정책 필요"
- 한국 기업의 해외 이탈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름
 -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 (누적)은 지난 2015년 2,859 억 3,200 만달러로 2005년보다 6 배 이상 (639.2%) 급증
 - 폴란드 (1,154%)에 이어 OECD 2위였고 평균 (84%)보다 8 배나 높음
 - 반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기업의 직접투자액은 2015년 1,795 억 4,400 만달러로 10년 사이 71.2%, 통계가 확인 가능한 OECD 25개국 중 15위
- 2012년부터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MOU)을 맺은 기업은 모두 85곳에 불과
- 심사를 통해 법률이 정한 기준을 넘은 기업은 반토막 수준인 43개
 - 한국경제연구원 : 이들 기업의 누적 투자 규모는 1,597 억원, 고용은 1,738명
- 막상 돌아와도 제대로 적응하기 쉽지 않음
 - 유턴기업지원법 적용대상 1호 기업 : 신용보증에 자금용자, 법인세 감면, 공장 건설 비용지원 등 정부가 내민 혜택에 2013년 한국으로 돌아옴
 - 하지만 온갖 규제를 뚫고 국내에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데 걸린 시간만 6개월 이상이
 - 여기에 생산 계획마저 틀어지면서 거래선도 떨어졌고 결국 법정관리 신세로 전락

U 턴기업 실적 추이
2016년 말 기준
(단위 : 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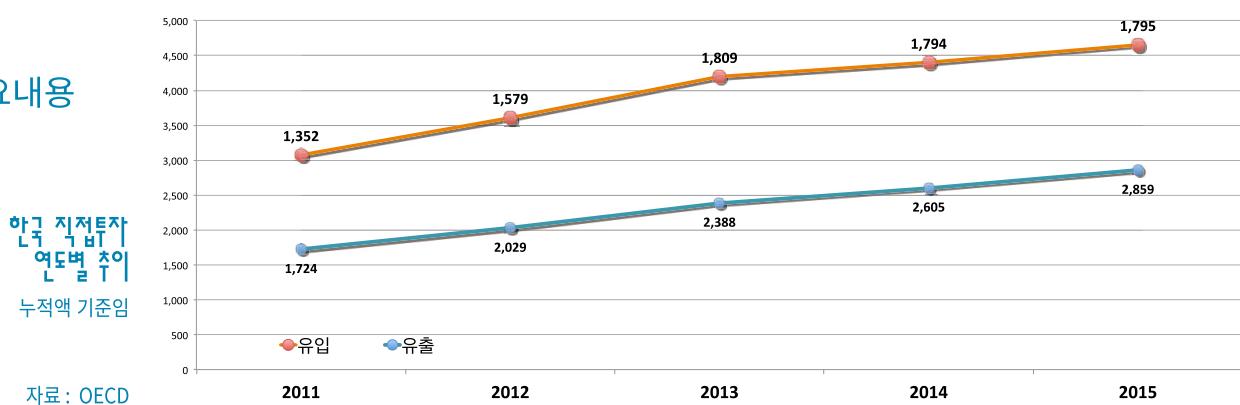


- 한국이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정부의 유턴 정책도 먹히지 않는 이유 : 대한 상공회의소 개선방안 A · B · C
- 개선방안 A : 경쟁국 수준의 규제환경을 조성 (Advancing regulation system)
 - 세계경제포럼 (WEF)이 평가한 2016년 한국 정부규제환경은 138개국 중 105위로 꼴찌수준
 - 독일 (18위), 미국 (29위), 일본 (54위) 등에 한참 뒤처짐
 - OECD의 외국인투자규제 정도 평가에서도 우리는 35개국 중 30위
 -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 (대한상의 자문위원) :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쟁국을 뛰어넘는 기업환경을 조성할 필요, 새 정부는 '무늬만 개혁'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

1. 규제공화국 민낯 ... 기업 이탈 세계 최고인데 U 턴은 겨우 43 곳

02

주요내용



- **개선방안 B : 정책신뢰도 제고 (Building trust)**

- 한국의 2016년 국제경영원 (IMD) 정책투명성지수는 조사대상 61개국 중 43위로, 인도네시아·필리핀보다도 낮음

- 이항용 한양대 교수 : 아무리 좋은 투자유치제도가 있어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자주 바뀌는 규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개선

- **개선방안 C : 투자유인체계 재구축 (Changing incentive system)**

- 한국의 부지제공, 세제혜택 등 투자매력도는 5.28점 (IMD 평가)으로 미국(7.09), 독일(6.36)에 비해 낮다고 분석

- 전문가들은 유턴 기업을 위해 더 화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

-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으로 소극적인 경향

- 기업 유치에 '올인' 하는 미국·일본·독일과 경쟁하려면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함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규제를 '일자리를 죽이는 산업 (job-killing industry)'이라 부를 정도" 라며 "규제 틀 전환 등 기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함

-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며 세율체계를 하나로 통일 (현재 7단계)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

- 일본도 우리가 규제프리존법안으로 벤치마킹한 국가전략특구를 시행하며 기업을 유혹

- 독일도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R&D) 보조금 지급 등 당근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실정

2. '지방분권 · 균형발전' 국정운영 핵심축 기대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내일신문

02

주요내용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방분권개헌을 포함한 지방분권 · 균형발전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방분권 · 균형발전을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건설 " 을 약속
-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지방분권 · 균형발전 정책을 국정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도 높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 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이란 제목의 지방분권 ·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

- 새 정부는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중단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복원
-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
- 지방분권 ·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개헌을 추진할 것
- 개헌안 : 4 대 지방자치권 (자치입법권 · 자치행정권 · 자치재정권 · 자치복지권) 보장 ,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 2 국무회의 신설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명문화
- 이를 뒷받침할 5 가지 공약

문재인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약속 1

• 자치분권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대통령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 2 국무회의 신설 및 정례화
- 중앙정부 권한 및 사무의 과감한 이양

약속 2

•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주민발의 , 주민소환 , 주민투표제의 확대
-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 국민참여 예산제 도입

약속 3

• 재정분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 수준까지 점차 개선
- 보편적 복지사업의 국비부담 대폭 증액

약속 4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만들고 혁신도시시즌 2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 혁신도시를 자족 여건 가준 대단지 클러스터로 육성
-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유도

약속 5

•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교육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최종 공약집에도 반영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에는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정책' 과 '살기 좋은 농산어촌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 쌀생산조정제 시행 , 농어민산재보험 · 100 원 택시 도입 , 수산직불제 확대개편 등)

4 대 비전 · 10 대 약속 중
6 번째 내용

3. "우리공약 먼저" 지자체 예산전쟁 시작됐다

0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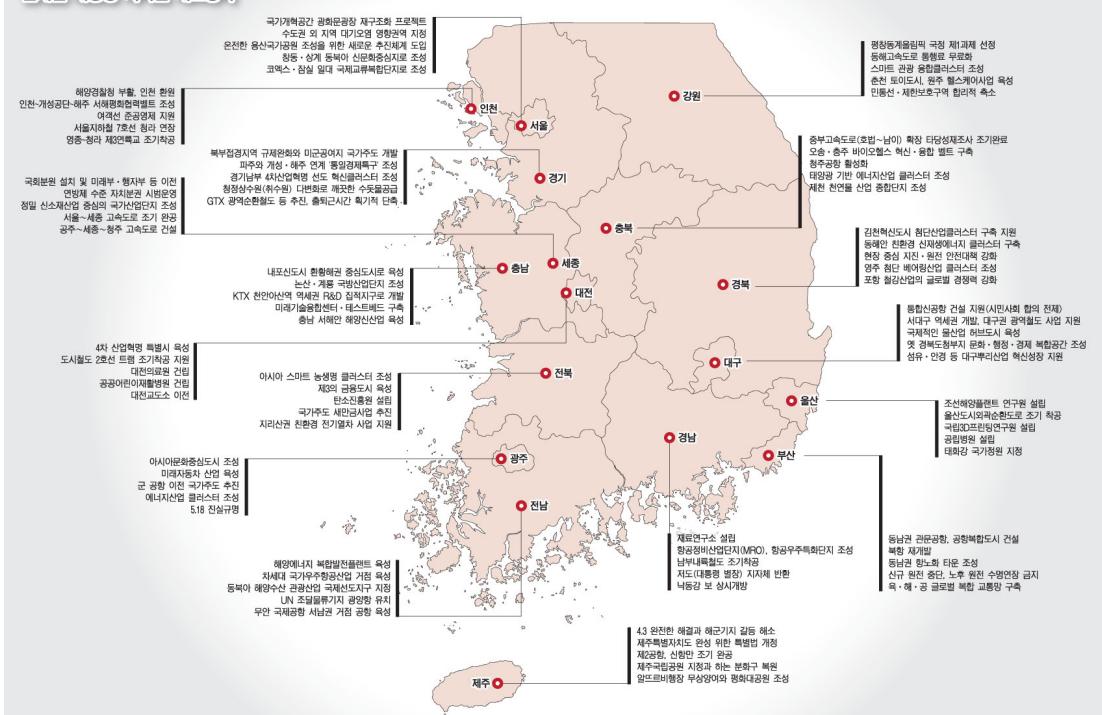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내일신문

02

주요내용

- 대통령의 지역별 공약을 관철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
- 특히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호남은 '화창한 봄날'을 맞은 분위기인 반면 보수정권의 텃밭인 대구·경북은 '냉혹한 겨울'로 인식하며 벌써부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
- 10년만에 정권교체, 뒤바뀐 영·호남
 - 10일 전국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별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팀을 꾸리는 등 분주한 모습
 - 매년 5월이면 중앙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시작하는데 이 때 지역별 대선공약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 올해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과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이란 특수한 상황이 전개

문재인 대통령 지역별 대표공약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 **광주시, 전남·북:**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역 발전 공약 실현과 내년 예산 반영 등을 위해 분주
- **광주시:** 이미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고 전남도도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을 접촉할 준비
- 특히 호남 지자체들은 정부 각 부처를 설득할 '논리개발' 세부실천계획' 준비에 박차
- 황봉주 광주시 정책기획관: 호남이 지역발전의 최대 기회를 맞이한 만큼 대통령 지역공약 실현과 내년 예산 반영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3. "우리공약 먼저" 지자체 예산전쟁 시작됐다

0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대구·경북은 벌써부터 바짝 긴장
- 대구·경북은 문재인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확실한 창구도 없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표도 밀어주지 않아 걱정이 태산
- 시장과 도지사 특별지시로 긴급 간부회의를 여는 등 부산
- 경상북도 :** 10 일 김관용 지사 특별지시로 김장주 행정부지사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
- 경상북도 :**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전담 대응팀 (T/F)을 구성해 중앙당과 소관 부처를 직접 방문해 설명한다는 계획
- 김관용 경북도지사 : 새정부 출범으로 정책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켜나가자
- 대구광역시 :** 11 일 오전 권영진 시장과 전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
우선 대구시가 민주당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7 대 핵심공약의 세부 실행계획서를 마련할 예정
이를 바탕으로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기재부 등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건의함으로써 국정과제로 채택될수 있도록 할 계획
- 권영진 시장 :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 대선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

경기도

- '20 개 핵심과제'를 선정,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재율 행정 1 부지사를 팀장으로 한 '공약사업 반영 TF' 팀을 본격 가동
- 문 대통령의 공약 중 경기도와 관련된 내용은 15 건
- 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이 해당
- 이외에 DMZ 통일관광특구 및 평화생태허브 조성, 경기만 고품격 관광·레저 거점화 등 핵심과제 5 개 정도를 추가로 선정, 정부와 여당에 적극 반영토록 건의할 계획
- 이재율 행정 1 부지사 :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인사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앙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에 공약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인천광역시

-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것은 해양경찰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서울지하철 7 호선 청라 연장, 영종~청라 제3연륙교 조기착공 3 가지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특별법 제정,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등을 포함
- 특히 이 사업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들이어서 속을 태우는 모습
- 인천시 관계자 :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 대부분은 국가가 추진해야 가능한 것,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시민사회·정치권과 공조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전시 :**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신 대통령 직속 '기획자문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고 기획위 동향 파악
5 월 안에 지역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를 공유하겠다는 계획
중점을 두는 공약은 4 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 세종시 :** '행정수도 완성'에 방점
중장기 목표로 청와대·국회 이전을 삼고 개헌에 대비한 연구용역에 착수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이 공약한 국회 분원설치와 미래부·행자부 이전에 대비, 청사 건립비 등이 내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
- 충북도 :** 이번주 구체적으로 세부사업계획을 만들어 다음주부터 중앙부처와 협의
내년에 당장 시작해야 할 사업으로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사업
- 충남도 :** 안희정 지사가 이미 2 주 전 중앙부처를 일일이 방문하며 관련 사업들을 직접 쟁취
문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지 못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에 힘을 모을 예정
- 충남도 관계자 : 11 일부터 각 실·국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

4.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개편

01
개요

보도형식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7.05.1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청와대

02
주요내용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장(장관급)을 두고, 8 수석 2 보좌관 체계로 재편함

-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 · 민정 · 사회혁신 · 국민소통 · 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소속으로 일자리 · 경제 · 사회수석 및 경제 · 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
 - 금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운영된 정책실장을 복원하여 국가 정책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
 -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을 두어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 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함
 - 과학기술보좌관을 두어 범부처적 4 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함
- 비서실을 개별부처 대응에서 정책아젠다 중심으로 개편
 -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새 정부의 국정과제 1 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을 신설
 -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일자리정책을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
 -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 긴박한 국정현안으로 등장한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 사회적 경제 · 기업 및 공유 경제의 육성 ·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
 -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정책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
- 소통,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고자 사회혁신수석 및 국민소통수석(구 홍보수석 개념)을 신설
 -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담당하며, 지역과 사회의 혁신적 활동들을 수렴함으로써 공동체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
 -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뒷받침
 - 대국민 소통 창구인 언론의 이해를 얻어내는 것은 물론 온오프를 넘나드는 쌍방향 소통과 국민공감의 국정홍보를 구현
 - 또한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두어 장기적 ·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 · 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하여 전반적인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
 - 다양한 국정현안과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 과제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직제령 제 8 조 규정)를 활용할 예정
- 급박한 외교 · 안보 위기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대폭 강화
 -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 · 국방 · 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하여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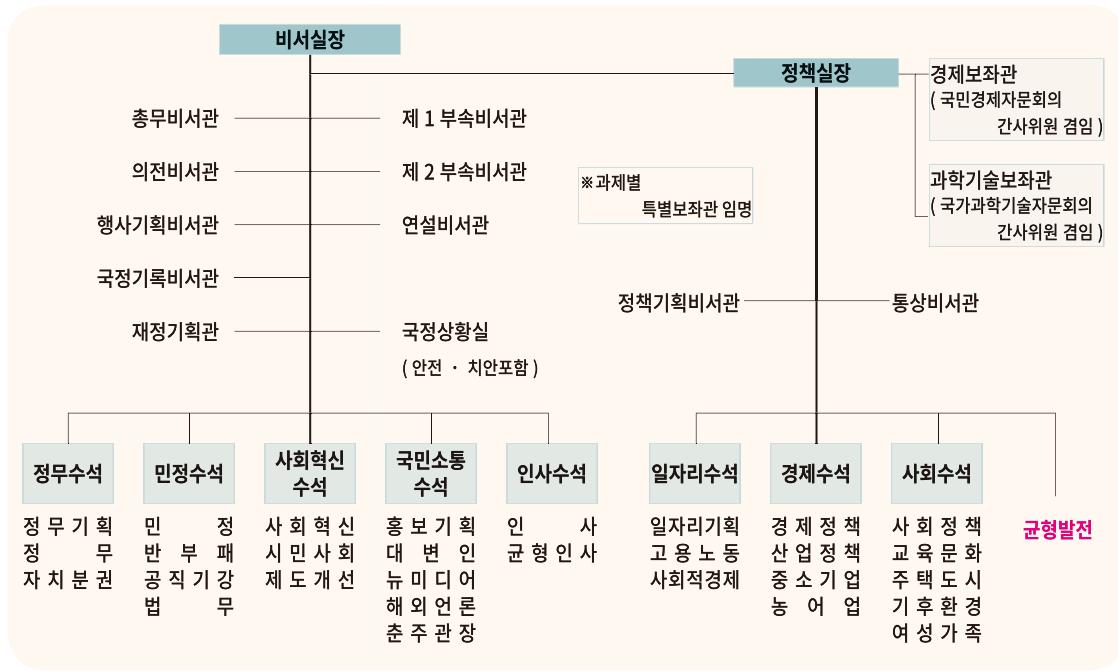
5. 자치분권 · 균형발전 비서관 신설...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2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강원도민일보

02

주요내용



- 청와대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 2 개실, 8 수석, 2 보좌관 체제로 재편되고 국가안보실은 1 차장과 2 차장으로 분리해 외교·안보를 총괄
 - 청와대는 11 일장관급 정책실장과 일자리 수석비서관 등 정책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
-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개편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확고히 보좌하는 청와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고 열려있는 청와대,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를 구현하는데 역점
-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홍보)·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소속으로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
 - 가장 큰 특징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됐던 정책실장을 복원해 정책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
 - 정책실장 아래 새 정부의 국정과제 1 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을 신설
 - 정무수석 비서관실에 분권과 자치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비서관과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와 분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될지 기대
 - 소통·통합·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홍보수석)도 신설
 - 청와대는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기능도 대폭 강화
 - 기존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안보실장이 남북관계와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을 통합 관리

청와대 운영찬 홍보수석
(국민소통수석)

6. 자유한국당 " 공약위한 추경은 반대...노동개혁 · 규제프리존법 처리해야 "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2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ChosunBiz

02
주요내용

-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10 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이 공공부문 일자리 81 만개 창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찬성할 수 없음
 - 12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으며,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서 지속가능한 진정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
- 일자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한국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노동개혁이나 규제프리존법 등을 조속히 처리
- 자유한국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추경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람
- 올해도 국세 수입이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돼, 추경으로 경제를 살릴 것을 주문해 왔는데 지연된 것을 유감
-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고 고용시장도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진작 추경을 했으면 지금처럼 심각한 지표가 나오지 않았을 것
- 추경이 민생을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영세자영업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7. 대북사업 · 행정수도 · 청주공항...지자체 숙원해결 기대 커졌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4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서울경제

02
주요내용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제시한 지역별 핵심 공약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성사 여부에 촉각을 세움

- **인천 ·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 그동안 지역 현안으로 제기돼 온 대북 관련 사업이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
- **부산 · 경남**: 김해 신공항 사업, 대구 · 경북은 미래형 자동차 콤플렉스 구축 등 신성장동력 산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 등이 지역 발전을 견인
- **광주 · 전라권**: 에너지 신산업 거점도시로 육성 사업에 기대
- **인천**: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가장 큰 기대
 - 문 대통령은 안보 불안 때문에 인천의 잠재력 발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
 - 인천 · 개성 · 해주를 잇는 ‘황금의 평화 삼각축’을 중심으로 황해권 경제블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 교착 상태인 현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인천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음
- **경기도**: 남북 관계 악화로 중단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음
 -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남북 사회 · 문화 · 체육 교류 활성화와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구상을 담은 다양한 평화통일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
- **부산 · 경남권**: 지역 최대 현안인 김해 신공항 건설이 화두
 - 부산이 정치적 고향으로 지역 현안과 민심을 잘 알고 있는 문 대통령은 김해 신공항이 대한민국 제 2 의 관문공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건설하겠다고 약속
 - 또 부산 발전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북항 재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원전 안전성 확보 등 굵직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사천 · 진주 항공사업 육성, 경북 김천 ~ 거제 남부내륙철도 착공, 서부 경남 항노화 클러스터 조성 등도 관심 사업
- **대구 · 경북**: 미래형 자동차와 물 산업 육성, 지진 · 원전 안전대책 강화, 김천 혁신도시 성장거점 도약 등의 현안이 공약에 반영됨에 따라 기대
 - 반면 대구 · 경북과 경남에서만 문 대통령이 득표율 2 위를 기록하면서 ‘상대적 홀대’를 받지 않 을지 고민하는 모습도 일부 보임
 - 특히 오는 2023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구 와 예비 이전 후보지 일각에서는 ‘통합 이전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음

7. 대북사업 · 행정수도 · 청주공항...지자체 숙원해결 기대 커졌다

02

주요내용

- **충청권** : 광역단체장 4 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으로 문 대통령 시대에 큰 기대
- **대전시** : 4 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 아래 스타트 응 · 복합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공약에 반영
- **세종시** : 반쪽짜리 행정도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세종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기반 확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
- **충남도**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첨단산업 육성, 백제 역사 관광자원화에도 새 정부가 힘을 보내줄 것으로 기대
- **충북도** : 충북을 바이오 산업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충북바이오밸리 완성에 초점을 두면서 중부고속도로와 청주국제공항의 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전을 펼쳐 성과를 낼 방침
- **광주시** : 빛그린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선도도시 구축 사업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 순풍이 기대
 -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에너지 신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공약으로 한전 공대 (KEPCO Tech · 캠���텍) 설립을 약속해 지역에서 큰 기대
 -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부담을 대폭 줄 이겠다는 대책이 공약에 포함
 - 하지만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와 군 공항 이전 대상지 문제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
- **전남도 관계자** : 지역 최대 숙원 사업으로 무안공항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호남고속철도 2 단계 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활주로 등 공항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꼭 성사되길 기대

8. 김보라 경기도의원,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5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기도민일보

02
주요내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더민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이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

- 김 의원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은 내용적 문제와 절차적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규제프리존법이 각종 규제 법안 위에 군림하여 나타날 역기능이 크기에 제정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
-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 본 법안 제43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를 보면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는 제31조를 통해 공공 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되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 역할 축소로 귀결될 소지가 있고 의료 영리화·민영화로 가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우려
- **농업 분야와 관련**
 - 규제프리존법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간척지 매립목적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 위탁 경영, 종자기술연구단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수의계약 매각 등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고 문화재, 백두대간, 산지, 국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초지에 대한 보호 및 전용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의 농업 존립기반도 위협받을 수 있고 난개발로 환경은 파괴되고 대기업만 이익을 얻게 될 것
- 아울러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등에 대한 위험 초래 가능성에 따라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 정부와 국회에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철저히 조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이 입을 피해 방지를 위해 법안 제정을 반대하고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됨
- 한편, 기재위를 통과한 본 결의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로 전달될 예정

9.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폐기 · 대폭 수정 전망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5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한국일보

02
주요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면서 박근혜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운명에 관심

- 양대 법안은 이미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시점부터 추진 동력을 잃은데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반대해온 법안이기 때문에 결국 폐기 수순에 들어설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
 - 14 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
 - 두 법안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치권에 통과를 호소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인 법안이지만 지난 3 월 임시국회에선 야당의 ‘신증론’에 부딪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음
- 문 대통령 캠프는 대선 기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자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음
 - 캠프 수석대변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논평에서 “의료 · 환경 · 교육 등 공공 분야에서 규제를 대폭 풀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강조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규제프리존법을 ‘재벌특혜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는 점도 새 정부에게는 부담
- 박 전 대통령이 일자리 69 만개를 창출한다며 국회를 압박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예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대폭 수정’ 이 명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5년 단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총론적 성격이 강하지만 ‘보건업’ 까지 포함해 논란
 -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재벌에게 특혜 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 의료 분야를 제외
- 전임 정부 지우기가 가속화할 경우 경제활성화법안도 폐기 처분된 역사 국정화교과서와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될 공산이 커 보임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 법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유사 법안을 대체 발의할 수도 있다”며 “법안이 존속된다고 해도 9 월 정기 국회에서나 논의될 전망
 - 새 정부가 관련 법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전까진 정책의 중심을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공무원들의 고충
 -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 거점산업 육성 등은 전임 정권에서 추진했다는 이유로 폐기하기보다 계속 추진 돼야 할 사업”이라며 “새 정부라 하더라도 규제 완화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는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함

1. [19 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 경기도 10 대 과제] - 경기도 규제완화 & 위상강화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02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기일보

02
주요내용

■ 수도권 주홍글씨 때문에… 경기북부 개발족쇄 역차별 심음

- 지난 18 대 대선은 물론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 때마다 ‘수도권 규제 완화’ 가 경기지역 이슈로 언급되는 가운데 이번 대선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2 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인구 수는 1 천 272 만 명으로 1 년 전보다 19 만 4 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 , 이는 서울시 993 만 명보다 279 만 명이 많은 것으로 전국 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도내 전체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한강 수질 보호 등 수도권규 제에 가로막혀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특히 북부지역의 많은 시 · 군들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도시보다 더욱 낙후돼 있는 실정
 - 양평군의 경우 군 내 양동면 등의 지역은 한강과 인접하지 않음에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 , 이 지역에 는 기업이 단 21 개소만 들어서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찾기 어려움
 - 반면 양동면과 경계를 맞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의 경우 불어 있는 땅임에도 비수도권으로 분류 , 규제 에서 자유로워 문막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 271 개 기업이 위치하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 지난해 양동면 내 인구는 4 천 651 명으로 집계됐는데 , 이는 지난 1985 년 (7 천 663 명) 과 비교해 절 반가량 줄어든 것이다 . 같은 기간 문막읍은 9 천 542 명에서 1 만 8 천 902 명으로 증가
 - 이에 따라 19 대 대통령 임기 내에는 경기북부지역 중 낙후된 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하거나 자연보전권역을 재조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이와 함께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전국 최대 자체에 걸맞 은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옴
 - 도 관계자 :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 며 근본적으로 전국 최대 자체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함
 - 현재 국정을 총괄하는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은 참여하고 있으나 경기지사는 참석할 수 없음
 -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구분되는 반면 경기지사는 한 단계 낮은 차관급으로 구분

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 도시재생... 서울시 숙원사업 탄력받을 듯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한국일보

02
주요내용

- ### ■ 수도권 지자체들의 정책과 자치단체장 역점사업 향배에도 관심
- 당장 광화문광장을 국가권력 상징공간에서 시민중심 민주주의 공간으로 바꾸려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
 -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광화문 대통령'을 표방하는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박 시장과 만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설명을 듣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약속
 - 서울시는 지난해 차도 축소 등 광화문광장 구조 개선을 제안했지만 정부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했음
 -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추진 중인 박 시장의 역점사업인 도시재생도 더욱 힘을 얻게 됨
 - 문 대통령은 서울시 모델을 수용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공약에 포함
 - 또 지난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박원순표 정책인 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수당) 은 문 대통령의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공약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시행
 - 경기도 : 문 대통령 공약에 무려 10 여건의 핵심과제가 반영되어 기대감에 부풀
 - 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경기지역과 관련, 모두 15 건을 약속
 - 이 가운데는 도가 미리 건넨 '경기도 국가전략 발전과제 (71 건)' 일부 (11 건) 도 포함
 -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 안산시 안산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안양시 50 탄악대 부지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 B · C 노선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되었음
 - 이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재율 행정 1 부지사를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 (TF) 팀을 꾸렸음
 - 김규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 : 비무장지대 (DMZ) 통일관광특구 조성과 경기만 관광·레저 거점화, 인천과 강원 동해안을 잇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개설 등 추가 사업도 발굴해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인천시 : 대선 공약에 반영된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영종 ~ 청라 제3연륙교 조기 착공 등이 국정과제로 확정돼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
 -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특별법 제정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조속한 이관, 항공기정비사업 특화단지 조성, 경인 아라뱃길 규제 개선 등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
 - 서북부 인천지법 지원과 인천지검 지청 설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백령도 신공항 조기 건설, 영종 ~ 신도 ~ 강화간 도로 건설 등을 비롯해 부산 등 다른 시도와 경쟁하고 있는 해사법원과 제2극지연구소 유치 등도 정부에 건의할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3. 경기북부 규제완화 · 통일경제특구 재추진...남북 긴장완화 ' 기대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News 1 뉴스

02
주요내용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 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재추진이 이뤄질지 340 만 경기북부민들의 관심이 쏠림

-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파주 · 김포 · 고양 등 경기북부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겠다"며 이른바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공약
-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 재개와 2 단계 확장 추진, 남한의 경제특구, 북한 개성공단과 해주 특구, 남 - 북한 공동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한다는 복안
- 문 대통령은 남 - 북한 공동 임진강 수자원 종합개발, 경원선 철도 연결, 금강산선 철도 복원과 장기적으로 남한 접경지역과 북한 여행금지구역을 자유무역지대로 건설하는 구상도 제시
- 경기북부는 고양시 · 남양주시 · 의정부시 · 파주시 · 양주시 · 구리시 · 포천시 · 동두천시 · 가평군 · 연천군 등 10 개 지자체 340 만명이 거주
 - 이는 서울, 경기남부, 경상남도, 부산시 다음인 전국 5 위 규모 준광역단체
- 하지만 60 년 이상 '안보' 명목으로 교통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곳곳에 미군부대와 군부대시설이 난립해 '군사 · 환경 ·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로 고통
 -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2015 년 기준) 가 56.2% 인데 북부지역만 따로 볼 경우 33.9% 에 불과한 실정
- 의정부시는 10 여년째 인구가 늘지 않아 경기북부 중심도시라는 별칭이 무색한 실정
 - 미군기지가 산재한 동두천시도 의정부와 사정이 비슷, 도내 끝찌 재정 수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실정
-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지만 교통망 구축과 사회기반시설 조성이 미비
 - 지역민들은 전철 7 호선 연장사업 조기착공을 통해 경기북부 전체 발전을 견인해달라고 요구
- 더구나 최근 북의 도발이 고조되면서 접경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해 남 - 북 긴장을 완화해낼지 귀추가 주목
- 문 대통령은 지난 4 일 경기북부 방문 유세에서 "파주 ~ 개성 ~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10 · 4 남북 공동선언이 만든 참여정부의 꿈이고 문재인의 꿈" 이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공언

4. 경기도 , 미군 공여지 개발 · 접경지역 규제 풀리나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향신문

02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미군 공여지 개발 ·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경기도의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경기도는 이재율 행정 1 부지사를 공약사업반영 TF 팀장으로 대통령 공약 반영과제 15 건과 도 추가 핵심과제 5 개 등을 묶은 'BIG 20' 을 마련 , 추진하겠다고 11 일 밝힘
-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 문제와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
- 대통령의 지역공약 중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에 기대
 - 경기도내 반환 공여구역 면적은 211 km²로 전국 공여구역의 87% 를 차지
 -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나서 반환 공여지 개발에 나섰으나 법의 미비와 재원 부족 등으로 개발에 어려움
- 도는 새 정부가 각종 중첩 규제로 낙후돼 있는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 특구' 로 지정 , 낙후된 북부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시킬 평화통일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에 기대
- 또 도는 지난해 9 월 연정 2 기 합의문에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음
 - 수도권광역교통청은 현재 서울 · 경기 · 인천시가 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교통본부' 를 해체하고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확립과 교통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인 · 허가권을 갖는 국토부 산하기구
 - 도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B·C 노선 건설 추진과 지하철 급행화 , 광역순환철도 건설 등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공약도 정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
 - 이들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
- 경기도는 대통령 공약 반영 과제 외에 비무장지대 (DMZ) 통일관광특구 및 평화생태 허브 조성 , 경기만 고품격 관광 · 레저 거점화 , 인천과 강원도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개설 등을 도 추가 핵심과제로 새 정부에 건의해 국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

1. '난개발' 위험 소규모 산업단지, 지방보다 수도권서 급증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08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충북일보

02 주요내용

| 최근 10년간 비중 증가율, 수도권이 지방보다 18%p 높아 수도권 '자연 보전권역' 소규모 단지 개발 허용 등이 주원인 수도권 규제 완화

- 역대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후보들의 주요 수도권 지역 공약에 포함
- 이런 가운데 이른바 '난개발'의 주요인이 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가 지방보다 수도권에 더 밀집돼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옴
- 장은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토연구원이 발간하는 주간 '국토정책 Brief(5월 8일자)'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의 계획적 공급 관리 방안" 이란 제목의 보고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의 계획적 공급 관리 방안

- 수도권 소규모 산업단지 급증
 - 전국 일반산업단지 평균 지정면적은 2001년 120만m²에서 2015년에는 90만m²로, 14년 사이 30만m²(25%) 감소
 - 전국에서 새로 조성된 산업단지 중 면적 15만m²이하 소규모 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말 34.6%에서 2016년 7월에는 58.3%로, 9년 6개월 사이 23.7%p 감소, 특히 수도권은 같은 기간 11.1%에서 52.4%로 41.3%p 높아짐
 - 이처럼 지난 10년간 지방보다 수도권의 소규모 산업단지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은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
 - 정부는 민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대규모 단지보다 토지매입 등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규모 단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
 - 또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2011년 수도권 3개 권역 중 '자연보전권역'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적 6만m² 이하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허용

• 소규모 산업단지 개선 방안 4 가지

- 소규모 단지는 산업단지 본연의 목적인 클러스터(집적) 구축 저해,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한정된 실수요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미래 개발 가능지 활용의 종합적 계획 부재 등 문제점 야기
- 소규모 산업단지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으로 4 가지를 제시
 - 첫째, 적절한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산업단지를 면적 기준 '15만m² 미만'과 '10만m² 미만'으로 세분
 - 둘째, 주변 여건, 토지용도 및 지목의 편입비율,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단지 지정 주체인 시·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입지 기준을 마련
 - 셋째,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도로, 녹지 등 적정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통합 지침을 개선
 - 넷째, 수급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산업단지에 적용 가능한 수요 검증 항목을 만들

2. 충남 수도권 규제 완화 새 정부서 철회될까 ?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0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중도일보

02
주요내용

새 정부에서 충남이 가장 수혜를 기대하는 것은 공약은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

- 대선 기간 가장 유력했던 문재인 후보는 충남의 대표공약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 특히 개헌과 맞물려 ‘지방분권형’과 ‘행정수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으로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개선은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
- 따라서 어떤 방식이 됐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10년간 추진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규제강화’로 전환점을 맞을 전망
- 이와 함께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은 연구개발 (R&D) 집적지구로 주목
 - 대선 후보마다 충남을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약속한데다 문재인 후보는 천안 아산 KTX 역세권에 융합 R&D 연구센터설립과 기업연구소 직접단지 설립을 약속
 - 4차 산업혁명 시범지구로서 미래기술융합센터와 테스트베드 구축에도 힘을 받게 됨
- 석탄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화력발전 과정에서 충남 서해안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등 대응방안도 주목
 - 이른바 ‘거리병산제’로 불리는 전기료 차등요금제의 전면 시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화력발전세’ 대폭인상 등의 후속조치가 기대
- 서산 그린 바이오융합클러스터 등 충남 서해안을 해양 신산업 전초기지로, 배후인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이번 정부에서 기대
- 백제왕도 유적복원으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백제권’ 개발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 대선과정에서 지역의 주목을 받은 대형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인 장항선 복선전철화, 보령선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조성, 천안역사 재정비,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도 탄력이 예상
 - 장항선 복선전철은 서해 축 준고속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한 여객·물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 조기 착수가 요구
 - 보령선은 충청산업문화철도도 필요성이 인정돼 제3차 국가철도계획 장기검토안으로도 선정
 - 국방산업단지는 계룡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논산·계룡 지역의 풍부한 국방 인프라를 대전 대덕특구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
 - 일부 SOC 사업 가운데는 지역의 요구에 밀려 대선 후보들이 지역공약에 마지못해 반영했지만, 정작 정부가 예산문제로 난색을 보여 추진에 어려움도 예고

3. 충북공약 사실상 12 건 '역대 최다'...중핵경제권 집중 육성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충북일보

02
주요내용

-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충북은 '중부권 중핵경제권'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선거공약서에 담은 충북 공약은 8 건, 충청권 상생공약은 2 건
 - 여기에 지난 7 일 충주 유세에서 문 후보는 대한노인회 중앙노인전문교육원 조기 건설, 충주·청주·진천을 무예스포츠 중심도시 육성도 약속해 사실상 충북과 관련된 공약은 12 건에 이른

| 선거공약서에 명시된 공약사업

-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 · 융합밸트 구축**
 - 이 가운데 제 1 공약은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 · 융합밸트 구축으로 바이오 분야 인프라 구축 최적지인 충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 세부적으로는 330 만m² 규모의 오송제 3 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및 제천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구성
- 충북혁신도시 중심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 청주공항의 활주로 길이 (2 천 744m) 가 짧아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운항이 어렵고 지난해 누적 이용객이 270 만 명에 육박한 점을 감안해 활주로 연장을 포함한 국제선 터미널 신축, 국제선 노선 다변화 등을 약속
- 중부고속도로 호법 ~ 남이구간 확장**
- 진로체험시설인 중부권 월드 잡 월드 (JOB WORLD) 건립**
-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교육 · 체험 · 연구) 조성**
- 충주호, 대청호, 미호천 연계한 친환경 휴양밸트 조성**
- 문 후보는 역대 대선 가운데 충북현안을 가장 많이 공약으로 채택**
 - 문재인 후보는 대선을 앞둔 8 일 청주 가경동에서 가진 유세현장에서 "충북을 다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 충청 경제를 살리겠다" 고 강조
- 대선은 끝났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이 새정부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됨**

4. 대전 · 세종 · 충남 주요 현안 '새 정부서 힘 받는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연합뉴스

02
주요내용

| 19 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문 당선인이 약속한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의 상당수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세부공약

-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대전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 건설 조기 착공,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등 충남지역 공약이 특히 눈에 띄임
 - 10일 대전시 등 3개 시·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문 당선인은 지역별 선거 공약서에서 대전을 '대한민국 실리콘 밸리'로 육성하겠다고 약속
-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스마트 응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 조성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과 대전의료원 건립
-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에 문화예술복합단지와 창조산업단지 조성 등
 - 또 대전권 연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조기 착공 지원, 대전교도소 이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도 추진
 - 충청권을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충남 논산·계룡·대전 조차장·조치원·청주공항 구간 복선화) 조기 추진 등도 공약
- 대전시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마련한 20건의 과제 안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호남선 고속화 사업, 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 하수처리장 조기 이전 지원 등을 빼놓지 않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 문 당선인의 세종시 공약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완성'으로 요약

- 서울에 집중된 행정 기능을 세종시로 옮겨 국토균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철학
- 국회 분원 설치와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 이전이 대표적인 정책
- 세종~서울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해 두 지역의 물리적인 차이를 좁힐겠다는 구상
 - 서울·안성(71km)과 안성·세종(57.87km) 등 크게 2개 구간으로 나눠 착공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2025년 개통될 예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와 정밀·신소재 산업 중심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도 기대

5. "전북, 실망없다" 공언대로 새만금·농생명산업 '꽃길 걸을까'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전북일보

02 주요내용

3월 23일
전북비전 선포식

■ 대통령의 전북공약은 농생명·혁신도시·신산업·새만금·지역현안·문화관광·SOC 등 7개 분야 10대 과제

- 3월 23일 전북비전 선포식 지역 공약 6 대 과제 : 혁신도시 연기금 농생명 거점 육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 조성, 국가 주도 새만금 사업 추진,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 추가사업 : 전주문화특별시 특별법 제정, 무주 - 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노령산 맥권 휴양치유밸트 조성,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등

혁신도시·농생명 산업 '방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공약에서 가장 앞세운 것도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과 농생명 거점으로 육성 - 전북혁신도시를 서울·부산과 함께 제 3의 금융도시로 육성 - 혁신도시에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과 농생명산업에 투자하는 연기금을 육성 - 전북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하겠다고도 약속 - 이미 지역에 기반을 두고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식품 (익산)·종자·ICT 농기계 (김제)·
탄소 등 미래 성장 동력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산업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도 집중 지원 - 전북을 탄소산업의 중추지역으로 키우기 위해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컨트롤타워로 삼고, 탄소밸리도 조성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과 정보통신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헬스케어산업도 뒷받침
새만금 국가주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북방문에서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 새만금이 거점이 될 것이며,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 - 청와대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국책사업답게 추진 - 이를 위해 매립방식을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신항만과 국제공항·도로·철도 수송체계 등 기본인프라 구축을 앞당김 -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공사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
문화·관광산업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지역 발전으로 연계하기 위한 공약도 제시 -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을 지원 - 박근혜 정부 공약이었지만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며 경북 영주와 차별했던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농업을 휴양 및 치유산업과 연계하는 국립치유농업원 조성도 대통령 공약 - 호남권 연계협력사업으로 노령산맥권 5 개 시군 (정읍시 · 순창군 · 고창군 · 전남 담양군 · 전남 장성군) 의 특성을 반영한 노령산맥치유밸트 조성도 지원 - 전통문화자원을 토대로 전주를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조선소 등 지역현안 해법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6 월 폐쇄 예정인 군산조선소 정상화 - 공공선박 발주와 노후선박 교체·해운사 국적선 보유 유도 등을 통해 물량을 늘리고, 선박펀드를 지원, 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 - 동서교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무주 - 성주 구간 건설도 추진

6. 대구경북에 내건 주요 공약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매일신문

02
주요내용

| 문재인 후보가 10 일 제 19 대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대선공약으로 내건 대구경북의 현안들이 차기 정부에서 순항할지 귀추가 주목

- 대선공약 사업의 경우 일단 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성이 크기 때문
- 대구시의 현안 중 문 후보 대선공약집에 포함된 사업은 총 13 개
 - 대구광역시 : 통합대구공항 지역거점공항 육성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첨단의료 허브 육성 , 서 대구역세권 개발 , 국제적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 , 대구 ~ 광주 동서내륙철도 (달빛내륙철도) 건설추진 ,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 이외에도 섬유 · 안경 등 대구 뿌리산업 혁신성장 지원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 구 경북도청 부지 문 화 · 행정 · 경제 복합공간 조성 ,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 , 대구경북권 광역철도 건설 지원 ,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할당제 실시
- 시 제안사업 중 시가 '사업추진 1순위'로 꼽는 사업은 통합 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 항으로의 육성과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 국가첨단의료 허브 육성 ,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등
- 경북도를 위한 6 대 공약을 발표
- 김천 혁신도시 지원 , 경북 동해안권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지진 · 원전 대책 강화 , 영주 첨단 베어링산 업 클러스터 조성 , 포항 철강 산업 지원 , 농가 판로 확대 지원
- 경북…김천 혁신도시 지원 경북 성장 에너지로
 - 김천 혁신도시가 해 온 그동안의 성과를 확장 ,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으로 연관된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 정주여건도 개선할 것

7. 울산공약 탄력 받을듯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울산매일

02
주요내용

- ### 제 19 대 울산공약 실현에 탄력을 받을 전망
- 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취임사에서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선거 과정에서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힘
 - 앞서 18 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울산 7 대 대선공약 중 지난 4 년간 완료된 것은 1 개 뿐이며 기대를 모았던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은 사실상 용도폐기된 상황
 - 이처럼 대선공약이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번 대선 공약만큼은 울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하는 이유
 - 문 대통령이 내세운 울산공약은 경제, 문화,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 3D 프린팅 연구원 설립
 - 중앙정부가 책임있게 나서 노·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새로운 노·사·민·정 대타협 모델 구축
 - 신고리 원전 5, 6 호기 건설 전면 백지화하고 울산과 주변 지역에 소재한 원전 단계별 정리
 - 재해·재난관리클러스터와 지진방재 센터 건립
 - 혁신도시로 이전한 에너지 공기업 및 지역 에너지기업의 신재생 에너지산업 추진
 - 공공병원을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북방해양 경제를 이끄는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등
 - 공약 중 신고리 원전 5, 6 호기 건설 전면 백지화는 지역 사회와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
 - 문 대통령의 울산 대선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정치권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
 - 지역 정치권 관계자 :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대선공약의 특성상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
공약실현은 결국 정치권과의 협치가 필요

8. 문재인 시대와 강원도 - 규제완화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2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강원도민일보

02
주요내용

| 지난달 8 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대통령이 원주를 방문해 강원도 공약을 발표

- 강원도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푸대접을 넘어 무대접을 받아옴
- 강원도는 남북 분단과 함께 60년 넘게 지역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각종 규제
 - 접경지역 군사규제, 산지 개발 및 농지 규제, 동해안 군 경계 철책선 철거
- 이를 도발전을 가로막는 3대 핵심 규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규제 혁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임
- 도내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군은 각종 군사 관련 규제
 - 도는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이지만 이 가운데 86%가 각종 개발에 엄격히 제한을 받는 보전 산지로 지정
 - 도내 동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선 210km 가운데 일부는 철거됐으나 1461km는 여전히 남아있음
 - 국방부와 업무협약 (MOU) 을 하고 철책선 철거에 나섰지만 수반되는 모든 예산은 도의 몫
- 도는 규제완화를 위해 대선 공약화를 추진
 - 대선기간동안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동해안 군 철책선 전면 철거
 -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률 북상과 군사규제 개선사업 (초소이전, CCTV 설치 등) 의 정부지원 근거 마련
 -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전면 철거와 재정지원

| 강원도 요청에 문대통령의 화답

- 안보상의 이유와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여건이 규제로 이어져 강원도 발전의 발목을 잡았고, 도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동해안 경계철책은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고 약속
- 또 획일적인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의 합리적 축소, 어민 생계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폐지,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피해 최소화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